

투데이 칼럼

북한의 이공계 교육 사업

북한은 지난 6월 노동당 전일회의에서 '교육사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 조치'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고등교육 과정을 문과와 이과로 나누고 대학에선 이공계 학과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런 변화는 북한의 경제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난 극복과 자립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신문도 비슷한 내용을 전했다.

학생들의 소질과 개성에 맞게 이과, 문과로 나누고,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학과 학과들을 많이 개설할 것을 강조했다. 김정은 정권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과학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이다.

이공계 강조는 과학기술을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기조와 관련이 깊다. 그는 과학기술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전국 학교에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설비들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 자료가 데이터로 보관된 과학기술전당도 지었다. 평양시에 은하과학자거리를 조성하고 과학자들을 위한 아파트편의시설을 지었다. 이곳에는 1천여 세대에 달하는 살림집, 학



정복규 논설위원

교, 병원, 타카스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이 있다.

세계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수상 등 이공계 학생들의 국제적 성과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인도에서 열린 코드셰프 대회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교 학생들이 7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엔 자체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 의지가 더욱 강력해졌다.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자립 경제 발전 노선으로 선회했다. 외부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의 활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과학 기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위해 과학과 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대에서는 학생과 교수가 팀을 이뤄 경제성과를 낼 수 있는 과학 기술 개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연구 덕에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각종 설비를 개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 경제발전까지 강조한 만큼 산업 현장에서 투입될 과학기술 인재 육성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북한은 강원도 김화군을 지방 공장 현대화의 본보기로 삼고 있다.

이곳은 2020년 수해에 따른 큰 피해를 입고 주택은 물론 공장 풀 생산 공장까지, 과학화 현대화 재건이 이루어졌다.

새 공장 건설에 투입된 인력의 대부분은 이공 계열 학생과 당당 교수들이었다. 김화군의 공장 설계를 설계하고 설비를 만드는 모든 작업은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한덕수 경공업대학의 교수, 연구자들, 그리고 학생들이었다.

이들이 전부 다 내려가서 건설에도 참여했다. 북한은 졸업 전 3학년 정도 이수를 하면 4학년 부터는 각 전공과 연결된 공장

기업소에 실습을 나간다. 언뜻 순조로워 보이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당과 정치권력이 최고의 가치가 된 북한 사회의 속성상 출신 성분이나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이공계 전공을 꺼린다.

과학자를 중시한다고 해도 눈 앞의 먹고 사는 문제를 만족스럽게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사나 보안원은 뇌물을 받아서 잘 살 수 있다. 반면 이과를 택한 연구원이나 과학자들은 뇌물을 받을 데가 없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 정치경제학과와 법학부 쪽이 직장 배치가 잘 된다.

그래서 김대(김일성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문과 쪽 학부가 인기가 있다. 북한은 여전히 '3대 혁명 소조 운동' 등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이공 계열 학생들을 경제 현장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보통 후진국들은 해외 연수를 하거나 유학을 하면서 교원의 자질을 높인다.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가 봉쇄하는 정책에 있기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교육 구조도 바꾸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에 걸 맞는 국가 차원의 지원 속에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룰지 의문이다.

사설

도내 공직사회 관련 선거 공모

전북 도내에서 이른바 '관공 선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유죄를 받았다. 이는 전 전북도지사의 3선을 돕기 위해 공직 조직이 동원된 전·현직 공무원과 부인, 측근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실체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수사 선상에 오른 30여 명 가운데 실제 기소된 건 14명이다.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권력을 위해 기관이 동원되거나 지위가 남용되기 쉬운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 지사 재임 기간 비서실장 2명과 정책보좌관 등 고위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발휘해 당원을 모았다.

도 예산을 지원받는 관변 단체 등이 동원되는 구조는 반복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공직 채용과 지위 보전이 선거 공모의 대가로 전락할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도청 일기제

공무원과 공무원 직원, 전 지사의 전주시장 시절부터 시절 공단에서 일한 직원 등이 유죄를 받았다.

이 가운데 3명은 자봉센터에서 당원 명부를 관리한 피고인과 함께 전 지사 지지모임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대화방을 운영하며 경선 일정과 관리당원 여부 등을 살피고 하위 모집책을 통해 당원을 모았다.

정치 종말 이후 위반이란 걸 알면서도 다수의 전·현직 공무원이 범행에 가담했다. 간부 지시를 받고 인사 압박을 느꼈다는 일기제 공무원 진술도 나왔다. 불법적인 일이라 못 한 다며 고충을 내비쳤던 하위직 공무원의 검찰 진술은 주목된다.

이해관계에 따라 범마저 여기는 공직 사회의 암묵적인 문화가 드러났다. 관공 선거 정황에도 동료들 위해 탄원서를 모았다는 일부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행태도 있었다. 원칙 없는 공직 기강에 도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잼버리 창고에 텐트 산더미

파행으로 끝난 새단금 세계 잼버리의 골칫거리는 또 있다. 아영장을 가득 채웠던 수단 개의 텐트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이다. 텐트를 구매하는 데에만 30억원이 넘는 세금이 쓰였다.

텐트로 빼곡했던 새단금 세계 잼버리 아영장은 조기 철수 결정이 내려지면서 하루 만에 자취를 감춘 텐트가 2만 3천여 동이다. 어디에 있는지 직접 찾아가 보니 부안의 한 건물에 있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식자재 마트로 쓰던 건물을 통째로 빌려 임시 보관 창고로 쓰는 곳이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잼버리 때 쓴 물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텐트부터 매트, 취사도구까지 온갖 물건을 담은 자루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여 있다.

임차 기간만 5개월이다. 건물을 빌려 쓰는 데에만 예산 2,500만원이 들어갔다. 텐트를 옮길 때 드는 인건비나 운반비 등은 별도다.

텐트뿐만 아니라 다른 매트도 부피가 크다.

아영장 내 창고에는 오래 못 두기 때문에 별도로 창고를 하나 빌렸던 것이다. 하지만, 보관 장소로 쓸 수 있는 공공시설이 부안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다. 준공 전 사용 허가 승인을 받고 지금은 쓰지 않는 정미내 정수원 리더센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회 이후 처리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다. 이후에도 계속 예산이 들어간다면 결국 조직위 잘못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잼버리 조직위는 대회가 끝나면 구입한 텐트를 팔기로 했지만, 이미지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보관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새단금 세계 잼버리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때

개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통학을 시작하면서 길거리에 어린이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동시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는 시기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만 8343건이 발생하여 75명이 사망하였다.

사고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사망자는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573건 발생, 11명이 사망하였는데 여기서는 어린이가 보행 중 사고가 약 67%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정우 고청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감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아파트 주변 등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곳에서는 서행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를 유지하여 어린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특히 22년 7월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 상관없이 일시 정지)을 꼭 숙지하여 운전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방어보행 3원칙(보다-서다-걷다)을 등·하교 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교육을 해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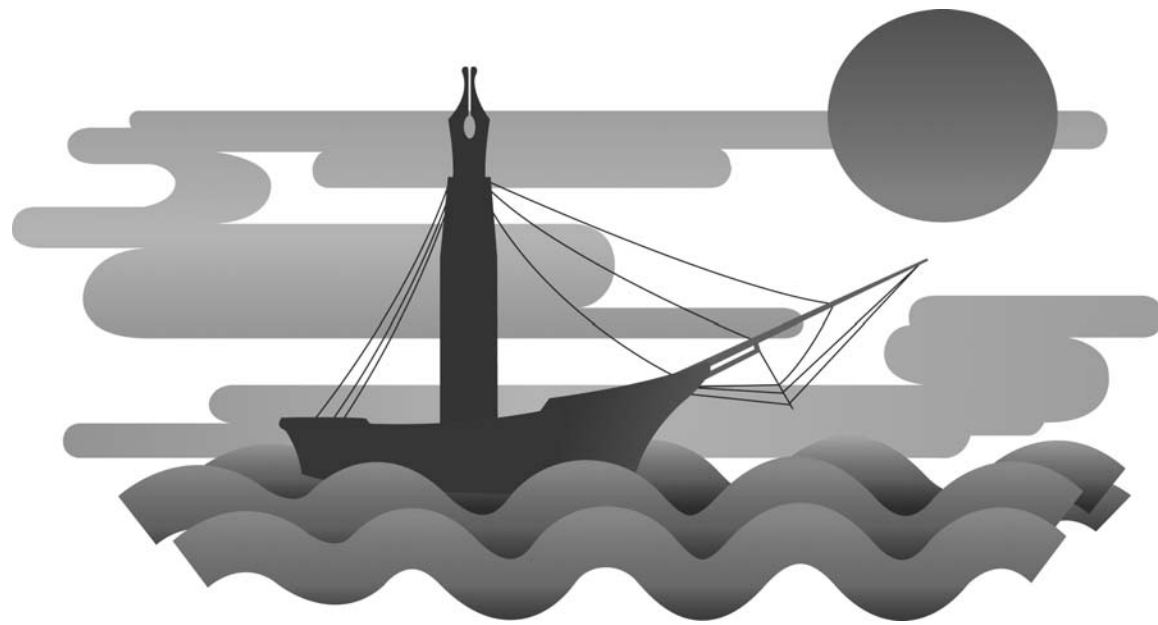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말이 있다. 이처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나는 관할겠지'란 생각보다 먼저란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 사고 예방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